

Vol. 47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7. 12. 4.

■ 정책동향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등
- 언론 동향 | 김영란법 / 한미 FTA 협상 주요 동향

■ 해외단신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국내단신

-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 연구지원

- 농촌진흥청, 단기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 결과

■ 현장여론

- 농업의 다원·공익적 기능 중 헌법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기능

정책동향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7.11.30.)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 11.27.]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건을 논의

〈추진경과〉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11.27.)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중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
 -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가액범위 조정 관련 전원위원회(11.27.) 상정안의 주요내용〉

- 음식물: 현행 상한액 3만 원 유지
- 선물: 현행 상한액 5만 원 유지
 -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 원까지 허용
 -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 농수산물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
- 경조사비: 현행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
 - 다만, 경조화환 포함 시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

〈향후 계획〉

-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 하여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12.11. 예정)
-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 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

※ 김영란법 주요 동향은 아젠다 발굴_언론동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충

자료 : 기획재정부(2017.11.29.)

- [기획재정부,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2기 성과발표회*」 개최, 11.29.] 우수팀(3개***)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
 - ※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 2016년 시범 수행(9개팀)한 후, 지난 4월 제2차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 공모전(24팀 선발)의 후속으로 진행
 - ※※ 창업팀 바른주방, 천안청년들, 손니움
- (향후 계획)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부문에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규모 확대,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창업저변 확충안정 고용창출을 확대할 계획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7.11.30.)

- [기획재정부,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1.30.]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하여 △2017년도 예산 집행점검, △2018년도 재정집행의 선제적 준비, △농림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
 -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주요 내용) 2%대 불용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재정집행을 마무리하고, 201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전작성, 수시배정·총사업비변경 협의준비 등을 마무리하여 선제적 준비를 시작
 - ◆ 11.22일까지 추경예산 총 9.6조 원* 중 9.1조 원(95.0%) 집행, 11월 계획 9.0조 원(94.1%) 대비 0.1조 원(0.9%p) 초과
 - ※ 추경 11.1조 원 중 농지특 결손보전(0.8조 원) 및 국채상환(0.7조 원) 제외
- [농식품부, “농림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발표, 11.30.] 농식품부는 연례적인 이·불용을 방지하고 재정사업 집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사전수요 조사를 강화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비 정산구조를 개선하며, △재정사업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집행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 (편성) 자체 타당성조사 강화, 중복사업 통폐합
 - (집행) 만성적 이전용 자제
 - (환류)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지출구조정 실시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및 연내 지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7./28.)

- [농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11.27.]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40kg 포대 당 3만 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
 - ※ 특등: 30,990원/40kg, 1등: 30,000, 2등: 28,660, 3등: 25,510
 - ※※ 올해 9월, 농식품부는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되 향후 쌀값 추이 및 현장여론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지급 시기) 11.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11.28일에 중간정산액 일괄 입금, 11.28일 이후 매입한 농가는 매입 시에 즉시 지급
- [농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 대금 연내 지급, 11.28.] 예년의 경우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일 예정) 이후 1월 중순경 시행되었으나, 올해는 농업인들의 연말 필요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연내 실시
 - ※ 최종정산액=중간정산액(3만 원/40kg, 1등급) - 매입가격(10~12월 평균쌀값)

농촌진흥청, 6차산업 고도화 위해 관련 사업 강화

자료 : 농촌진흥청(2017.11.28.)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포럼' 발족, 11.28.] 6차산업의 고도화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농촌자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자원사업 관계관으로 구성된 농촌자원포럼이 발족
 - ※ 2018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자원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및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소규모 창업 및 시설장비 개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농촌자원활용 체험시범,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등 225개
- (주요 내용) 농촌자원포럼은 11.28~29일 양일간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2017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공식 출범하며, '농의소득 창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을 주제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
 - ※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농촌자원분야별 우수사례 발표와 분야별 농촌자원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도 사업추진방향을 협의하고, 6차산업기술 보급 유공자를 비롯해 6차산업 성과확산 우수기관과 개인 등을 선정·시상

㉔ 정책동향

〈2017년 농촌자원사업 주요성과〉	
◆ 지역 농산물 종합가공 및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시범사업 확대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2010~2016) 44개소 → (2017) 69(신규25)	
- 농업인 창업코칭 1,320명, 가공시제품 개발 223건, 기술이전 101건 등	
- 농업인 소규모 창업: (2010~2015) 204개소 → (2016) 18 → (2017) 34	
◆ 6차산업화 정책대상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확대	
- 시범사업 확대: (2014) 197개소 → (2015) 229 → (2016) 294 → (2017) 306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6차산업 가공상품 판매 확대	
- 농협중앙회와 협약(1월) ⇒ 6차산업 인증사업자 입점(48개)	
- 공영홈쇼핑 런칭(8개소), 주위메프 입점(86개소), aT사이버몰(40개소)	

「2017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7.)

- [농식품부, 「2017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 11.29~12.2] 올해는 ‘맛을 담아, 희망을 담아’란 슬로건으로 190여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식품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판로상담지원, 창업투자상담, 최신 시장 정보 등을 제공

※ 우리나라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온 대표 식품박람회

- (주요 내용) △5대 식품트렌드(천연식품, 발효식품, 건강식품, 디저트·음료, 간편식품)에 맞추어 식품기업들을 배치, △참가 중소식품기업이 해당 기업의 강점과 특징을 판매·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부대행사 개최

「2018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8.)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8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11.30.]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식품외식업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 트렌드 등 산업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

- (주요 내용) △1부·기조강연 ①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된 일본의 식품산업현황 설명(일본개회식품협회 회장, 모이 요시미츠) ②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 산업의 신뢰도 제고 방안(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향기), △2부·전문분야별(식품산업, 외식산업, 농식품 유통)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국내 전문가 강연 진행, △부대행사·식품 산업통계정보(FIS)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참석자들의 오감을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영

「2017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8.)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7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 개최, 11.27.~28.]
한국과 외국의 농촌관광 사례발표, 토론 등을 통해 자원정보공유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개최
 - ※ (참석자) 국내...관광전문가, 국내여행업계관계자, 농촌관광 주체, △해외...관광전문가, 여행업계 관계자, MICE업계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기조강연과 국가별 발표자와의 토론, △농촌관광자원 소개와 체험을 위한 **전시***, △국내 농촌 관광 자원 **설명회/상담회****, **홍보***** 등을 통한 한국의 농촌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인지도 제고
 - ※ 농촌관광주체(농촌체험휴양마을, 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찾아가는 양조장 등) 홍보 및 체험 전시부스 운영
 - ※※ 해외 바이어(29개업체 50여명) 대상 농촌관광 상품·자원 설명 및 1:1 비즈니스 상담
 - ※※※ 포럼 참가자 대상 농촌관광자원 팸투어(2박3일) 실시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

자료 : 외교부(2017.11.28.)

- [외교부, ‘제17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 11.27.]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 (**한국 측**) 지난 9월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이 제시한 **「5개 협력의 틀*」**과 **「9개 다리 전략**」**을 기반으로 양측이 **협력을 본격화** 하고, 이를 위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협력 사업에 집중**하자고 제안
 - ※ (5개 협력의 틀) △한-EAEU FTA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한국기업 진출 촉진제도 구축
 - ※※ (9개 다리)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 (**러시아 측**) 러시아 측이 한국 측에서 제기한 **「9개 다리 전략」** **실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

제3차 한국-세계식량계획(WFP) 정책협의회 개최

자료 : 외교부(2017.11.28.)

- [외교부·세계식량계획(WFP), 제3차 한-WFP 정책협의회* 개최, 11.28., 서울] △국내 잉여쌀을 활용한 개도국 식량원조, △우리 국민의 WFP 진출 확대 등을 논의하고, WFP(World Food Programme)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 상호 협력 확대 방안과 구체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 ※ (한국 측)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WFP 측) 크리스 케이(Chris KAYE) 공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 ※※ 제1차 한-WFP 정책협의회(2015.6.10., 서울), 제2차 한-WFP 협의회(2016.12.14., 로마)
- (한국 측)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주요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에 대한 우리의 기여액 증대, △2011년 WFP 서울사무소 설치, △2015년 한-WFP 파트너십 협정 체결, △2015년 이후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
- (WFP 측) △우리 정부가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여 인도적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 △식량안보, 운송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WFP와 한국 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 △WFP의 식량안보 분야 전문성과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접목해 가는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
- 한편,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WFP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긴급 식량지원 사업」 및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기 지원 사업」에 우리 정부가 각각 250만 달러를 기여기 위한 사업약정에 서명

한국산 배 생과실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수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30.)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 최종 합의, 11.22] 한·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 간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2017.11.22일자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18년부터 수출 가능
 - ※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 여톤이 미국, 대만 등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중남미 수출 시장은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로 확대
-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국제기구(WTO/SPS)에 통보하고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발효될 예정,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9.)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결정, 11.29.] 1,200년을 이어온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으며,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 과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 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3년만의 성과
 - ※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7년 10월 기준, 17개국 38개 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 유산지역의 주요 특징) △생계유지를 위해 척박한 지리산 산비탈에 차밭을 조성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것에 대해 역사성을 인정받고, △전통적인 차밭 관리는 풀을 직접 뽑아 거름을 대신하는 방식과 바위와 돌 틈의 산비탈에 조성된 차밭이 지리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우수한 경관을 형성

‘도시녹화운동’으로 도시숲 160ha 조성

자료 : 산림청(2017.11.27.)

- [산림청, 도시숲 160ha 조성, 11.27.] ‘도시녹화운동*’ 을 통해 올해 조성한 도시숲 규모는 10월 말 기준 160ha로 전년(130ha) 대비 23% 증가, 특히 올해는 약 45만 명이 참여하고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수목이 12만 그루에 달하는 등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
 - ※ 도시녹화운동은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기증하거나 심는 사회공헌활동
- (향후 계획)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9.91㎡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9㎡를 달성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비 650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2018년에 500ha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할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11.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27.]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11.24.)

-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11.24.]**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 → 33) 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실시
 - ※ (기존) 27종 → (확대) 33으로 확대,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펜 등)도 검사토록 검사방법 개선
- **(조사 결과)** 2개 농가(경기도 1곳, 충남도 1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펜)이 검출(0.1~0.12mg/kg)되어 부적합 판정*
 - ※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펜 포함) 잔류허용기준: 0.02mg/kg
- **(조치 사항)**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 △해당 농가 출하 중지,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 적용,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

■ 유통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세부내역 ■

검사기관	농가명(농장주명)	주소	검출량 (mg/kg)	난각코드	전수조사시 부적합여부
경기도	윤0일(영흥농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342	0.12	08영흥	신규 생산 농가
충남도	윤0우(주현농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1길 31	0.10	11 YJW	부적합(비펜트린)

AI(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1.25./27./28./29./30.)

- [경기도 화성시(화옹호)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2.) ⇒ 저병원성 AI(H5N3형) 확진(11.25.)] 경기도 화성시(화옹호)에서 채취(11.20.)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25일 최종 확진하여 방역대 해제
-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3.) ⇒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11.27.)]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11.21.)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 최종 확진
- [경남 고성(고성천) 야생조류 분변 2건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4.) ⇒ 저병원성 AI(H5N2형) 확진(11.27./29.)] 경남 고성(고성천)에서 채취(11.22.)한 야생조류 분변(2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각각 저병원성 AI(H5N2형 2건)로 최종 확진하여 방역대 해제
- [충남 서산(잠홍저수지)·충북 청주(무심천) AI 바이러스 검출(11.22.) ⇒ AI 바이러스 최종 미검출(11.30.)] 충남 서산(잠홍저수지)·충북 청주(무심천)에서 채취(11.22.)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11.30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5.) ⇒ AI 바이러스 최종 미검출(11.30.)]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11.23.)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11.30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전북 정읍(동림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5.) ⇒ 저병원성 AI(H5N3형) 확진(11.28.)] 전북 정읍(동림저수지)에서 채취(11.23.)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28일 최종 확진하여 방역대 해제
- [전북 완주(만경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7.) ⇒ 저병원성 AI(H5N3형) 확진(11.29.)] 전북 완주(만경강)에서 채취(11.22.)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29일 최종 확진하여 방역대 해제
- [전북 정읍(고부천) 야생조류 분변 H5N2 AI 바이러스 검출(11.29.) ⇒ 저병원성 AI(H5N2형) 확진(11.30.)] 전북 정읍(고부천)에서 채취(11.24.)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 11.30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움에 따라 방역대 해제

㉔ 정책동향

- [경기 안양(안양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경기 안양(안양천)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9일 검출되어 방역조치
-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9일 검출되어 방역조치
- [제주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11.30.)]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 AI 바이러스 항원이 11.30일 검출되어 방역조치

아젠다발굴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등

이슈 브리프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등

□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 LG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업의 미래, 어그테크(Agtech) 스타트업” (2017.11.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어그테크(Agtech)란?]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합성어**(Agriculture Technology)로서 농업생명공학기술(Ag Biotechnology), 정밀농업(Precision Ag), 대체식품(Innovative Food), 식품 전자상거래(Food E-commerce) 등을 아우르는 분야
-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 수집·분석, 가공, 유통** 등 확장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
- [어그테크 성장배경] 농업은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산업이지만 **혁신적인 IT, BT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그 예로 **잡초 제거, 과일 수확, 작물보호제 살포** 등의 영역에 **로봇 기술이 활용**
- [어그테크 스타트업 발전 현황] 어그테크 분야 중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식품 전자상거래****, Ag Bio-technology, Farm Management SW·Sensing&IoT 등이며,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한 스타트업들은 농산물 생산력 강화, 유통 효율화, 소비 첨단화** 등 밸류 체인 전반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음.

※ 스타트업: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 갓 창업한 곳에서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위치한 기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 2016년에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식품 전자상거래사업이 40%를 차지하였고, 인터넷·모바일의 보급 확대, 결제 시스템과 물류 특히 냉장 물류의 발전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

■ 2016년 TOP 투자 유치 기업의 사업분야 ■

순위	기업명	사업 내용	금액(백만 달러)
1	Yiguo.com	식품 전자상거래	200
2	Indigo	토양·작물 관련 기술	156
3	Bigbasket.com	식품 전자상거래	150
4	Benali life	식품 전자상거래	117
5	Thrive Market	Supply chain 관련 기술	111

㉔ 아젠다 발굴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식품 전자상거래 산업은 ‘다양함’ 과 ‘편리함’ 이라는 니즈를 재빨리 읽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업영역**. 업계의 빠른 성장에 주목한 **아마존, 허쉬, 타이슨** 등 **글로벌 식품 및 유통업체들도** 최근 이 **시장에 진입**
-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로 확장] 어그테크 스타트업 역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지에서 **다양한 어그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
 - 미국이 전체 어그테크 스타트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0%에 이르렀으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져서 2016에는 50% 수준에 머물러
- [어그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 확대] 어그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0년 4억 달러**에서 **2015년 46억 달러**로 **연평균 40% 이상 증가**, 2016년은 32억 달러 투자되어 2015년 대비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10% 이상 증가
 - 특히 **2015년 투자 규모가 급증**하였던 것은 **식품 전자상거래산업의 성장, 정밀농업에 대한 관심 급증, Agbiome(바이오작물보호제 관련 스타트업)의 제품 출시** 등이 원인으로 작용
- [산업의 역동성 확산]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자 역시 큰 변화가 없었던 산업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농업은 매우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화**
 - 어그테크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군열들은 장기적으로 몬산토, 바이엘, 존디어, 카길 등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 낸 **철옹성 같은 게임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㉕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캥거루 출발법**」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2017.11.28.)**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혁신**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우리 **경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혁신성장’** 이 **시급**하다고 강조
 - 특히,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 생산성(혁신)** 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사회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
 - **교육, 사람, 의식, 제도,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고, 4대 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 경제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

㉔ **아젠다 발굴**

<4대 부문 혁신>

- **[1. 과학기술 혁신]** TDX, CDMA, 64M D램 등 과거 우리경제 먹거리의 뒤를 이을 먹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과학기술 혁신” 필요
 -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 표준선점 등의 정책방향 제시
- **[2. 산업혁신]** 국내 유니콘 기업*이 2개에 불과한 현실 등을 지적하며 “산업혁신” 강조
 - ※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 **(정책과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 등 정책방향 제시
- **[3. 사람혁신]** 우리 교육이 획일적이 아닌지 반성이 필요, 공무원 준비에 몰두하는 한국과 창업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람혁신” 이 필요
 - **(정책과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정책방향을 소개
- **[4. 사회제도 혁신]** 규제로 인한 ‘안데 공화국’,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 현실을 지적 하면서 “사회제도 혁신” 필요
 - **(정책과제)** △규제혁신, △사회적 대화, △공정경제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

<가시적 성과 도출>

- 혁신성장과 **과거 성장전략**과의 **차이점**은 **가시적 성과 도출**에 있으며, **혁신성장**은 **Bottom-up**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
- 한편, **혁신성장**을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 두 가지**는 바로 1) **규제**와 2) **일자리**
 - **(규제)** **속도가 관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더욱 **가시적 성과**를 **도출**
 - **(일자리)** **사회적대타협, 고용안정성 확보, 노사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
- 특히, **사회적 대타협**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규제혁신**에도 **필요**
 - 총론에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이익집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

㉔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김영란법 / 한·미 FTA 협상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주요 일간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김영란법 주요 동향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 2017.11.27.]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11.27.)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 →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어 11.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밝히고, 설 이전 법 개정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

※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격이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 15명으로 구성

※※ 박은정 국민위원장 포함 3명이 불참했고,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

- (부결 원인) △여론 저항에 대한 부담, △농축수산 종사자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국회에 관련 법이 개정돼 있다는 점 등도 일부 영향
- (국회)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을 포함해 10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사 진행
- ※ 권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입장 밝혀
- (농축산업계) 농민들 피해 현실 너무 모른다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 재추진 촉구

〈농축산업계 동향〉

- ◆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가액 조정 부결」 농축산업 피해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도인가? 전원위원회 위원의 무지인가?(2017.11.28.), 부정청탁법 가액 조정보다는 「제외」 개정이 답이다. - 국회 정무위, 「제외」 「명절 제외」 법 개정 조기 결론내야(2017.11.29.)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2017.11.28.) 축산권익을 무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성해야 하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2017.11.28.)
- ◆ (한국농축산연합회) 11.28일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강력히 요구

- [이낙연 국무총리, 농축수산물 10만 원 상향 개정안 ‘재상정’ 시사, 11.29.] 이낙연 국무총리는 11.29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머지않아 재개정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

㉔ 아젠다 발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靑 결정 존중” (KBS, 2017.11.28.), “靑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2017.11.28.), “법 취지 훼손 반감 커…업종간 형성평 부담도” (서울경제, 2017.11.28.), “청와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연합뉴스, 2017.11.28.), “선물상한액 10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2017.11.28.), “권익위, 농축산업 피해 현실 너무 모른다” (한국농어민신문, 2017.11.28.), “농업계, 내년 설도 대목 없다” (한국농업신문, 2017.11.28.), “김영란법 개정, 설 넘기면 의미 반감” (매일경제, 2017.11.29.), “이낙연 총리, 농축수산물 10만원 상향 개정안 재상정 시시” (아주경제, 2017.11.29.), “李총리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 수정안 준비中…내년 설 이전 개정” (조선일보, 2017.11.29.),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불발’ ” / “농민 피해 최소화 단조조차 외면” (축산신문, 2017.11.29.),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재수진,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췄는데…” (한겨레, 2017.11.29.), “이 총리, 김영란법 개정 재수진 경조사비 10만→5만원으로 강화” (한국일보, 2017.11.29.),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급제동… “계속 희생해야 하나” 농민 강력 반발” (농민신문, 2017.11.30.), “김영란법 개정 부결…이 총리 ‘실연후전 개정 의지’” (농축유통신문, 2017.11.30.), “李총리 청탁금지법 수정안 내년 설 이전 재상정” (서울신문, 2017.11.30.), “한우협회, “김영란법 개정, 농축산물 제외가 답” (한국농업신문, 2017.11.30.)

□ 한·미 FTA 협상 주요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12.1] 11.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최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 앞서, 농축산업(11.22), 제조업(11.23) 등 분야별 간담회 개최
 -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제조업, 농업) 주제발표(이진면, 한석호),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FTA의 역진은 기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며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역진(과거로의 회귀) 없이 개정협상을 마무리하려면 관세 추가 인하·비관세분야 협력 등을 모색해야
-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 “국내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 증가만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 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지적, 이에 따라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 고 밝혀
-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정부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고 언급

㉔ 아젠다 발굴

-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무역이익공유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며 “미흡한 부분이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다양하게 노력, 연말까지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설명
-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지만, 취업자 수는 5% 수준”, “만약 농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 이라고 강조
-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강조
- (농수축산대책위원회*, “FTA 개정협상이 아닌 폐기 요구해야”) “한·미 FTA 폐기·개정 협상 반대, FTA로 인한 국내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난 정부의 무차별·무분별한 FTA 추진정책을 처음부터 전면 검토해야”, “농업 외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으로 구성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세 철폐 시 축산업 붕괴 우려, 개정협상서 제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200만 달러인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1800만 달러에 그쳐”, “2022년 돼지고기, 2027년 쇠고기는 관세율이 0%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의 붕괴마저 우려”,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까다로운 점이 문제”, “한·미 FTA 협정 자체의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대처와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었던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고 촉구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한·미 FTA 폐기해야”)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관세를 인하할 경우··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면 한·미 FTA 폐기를 주장,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하며,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기준으로 한·미 FTA의 실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고 강조
-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하여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

㉔ 아젠다 발굴

자료: “한미FTA 2차 공청회 다시 열어…추가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2017.11.30.), “한미 FTA 2차 공청회 1일 개최…농축산업계도 참여” (연합뉴스, 2017.11.30.), “한미 FTA 2차 공청회, 내일 개최…농축산업계도 참여” (헤럴드경제, 2017.11.30.), “한미 FTA 개정 2차 공청회…농수축산 단계 개정협상 중단해야” (NEWSIS, 2017.12.1.), “한미 FTA 공청회, 토론 시작 하자마자 농민 패널 과도 설전” (머니투데이, 2017.12.1.), “한미 FTA 과거회귀 안하려면…관세 추가인하·비관세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2017.12.1.), “한미FTA 2차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짜질’ ” / “정부 한미FTA 협상, 국익우선… 농민단체 미국만의 페널티릭” (연합뉴스, 2017.12.1.), “한우농가, 한미 FTA 개정협상시 현행 관세 25% 동결 요구” (헤럴드경제, 2017.12.1.)

-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의* 개최, 11.30.] 한·미 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통상절차법 제21조)

- (한·미 FTA 개정)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
- (수입규제)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언급
- (자문위원) 한·미 FTA 개정 논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측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급증하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

자료: “산업부,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17.11.30.), “산업부 한미 FTA 개정, 농축산업계 귀 기울일 것” (YTN, 2017.11.30.), “산업부 한미FTA 국익 최우선으로 통상현안에 대응” (아시아경제, 2017.11.30.), “강성천 통상차관보 한미 FTA 개정협상, 농축산업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헤럴드경제, 2017.11.30.)

- [전국축협조합장 성명서 발표, 11.30.]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시 축산분야를 추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개정 등 기존 불합리한 조항에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

자료: “축협 조합장들 한미 FTA 축산 추가개방 안된다” (NEWSIS, 2017.11.30.), “전국 축협 조합장 한미 FTA 개정 축산분야 제외해라” (식품음료신문, 2017.11.30.), “축협 한미 FTA 재협상시 축산분야 제외돼야…추가개방 불가” (연합뉴스, 2017.11.30.), “전국축협 조합장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 추가개방 제외하라” (파이낸셜뉴스, 2017.11.30.)

해외단신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OECD, 기획재정부(2017.11.28.)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 11.28.] △세계경제·2017년 3.6%, 2018년 3.7%, 2019년 3.6% 성장하고, △한국경제·2017년 3.2%, 2018년 3.0%, 2019년 3.0% 성장 전망

※ OECD는 매년 2회(6월, 11월 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

<세계경제 전망>

-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고용 호조·투자 반등 및 세계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개도국 동반 회복세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미약한 임금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요인 상존

■ 주요국 경제 전망 ■

주요국		전망 내용
선진국	미국	자산 가격 상승 및 심리지표 호조에 따른 소비·투자 증가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
	유럽	글로벌 생산·무역 회복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일본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및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신흥국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브라질/러시아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회복세 지속

- [정책권고] 각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거시정책과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정책패키지를 통해 잠재성장을 제고 필요
 - (거시정책) 통화정책 정상화는 실물경제·금융·물가 등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지속 필요
 - (구조개혁) 상품시장 경쟁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 일관된 구조개혁 정책패키지 추진 필요

<한국경제 전망>

- [2017년 및 2018년 전망] △2017년··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2018년··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 지속 전망

㉔ 해외단신

- (하방요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긴장
- (상방요인)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확산된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 향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
- [정책권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축소와 구조개혁 병행 필요
-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정 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 필요, 또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 한국경제 전망(%)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6월	2017.11월	2017.6월	2017.11월	2017.11월
GDP 성장률	2.6	3.2	2.8	3.0	3.0
민간소비	2.0	2.3	2.7	2.5	2.7
총고정자본형성	7.2	9.4	2.9	2.9	2.7
수출	3.9	3.2	4.4	4.4	4.3
수입	7.5	7.7	3.8	3.3	4.2
실업률	3.8	3.7	3.7	3.5	3.4
소비자물가	2.0	2.1	2.0	2.1	2.1
일반정부 재정수지	2.0	1.8	1.8	1.7	1.5
경상수지(對 GDP)	6.0	5.6	6.0	5.7	6.0

■ 2017년 11월 주요국 성장 전망(%)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6월	2017.11월	2017.6월	2017.11월	2017.11월
세계경제		3.5	3.6	3.6	3.7	3.6
미 국		2.1	2.2	2.4	2.5	2.1
유 로		1.8	2.4	1.8	2.1	1.9
일 본		1.4	1.5	1.0	1.2	1.0
독 일		2.0	2.5	2.0	2.3	1.9
프 랑 스		1.3	1.8	1.5	1.8	1.7
영 국		1.6	1.5	1.0	1.2	1.1
한 국		2.6	3.2	2.8	3.0	3.0
그 리 스		1.1	1.4	2.5	2.3	2.0
스 페 인		2.8	3.1	2.4	2.3	2.1
이탈리아		1.0	1.6	0.8	1.5	1.3
호 주		2.5	2.5	2.9	2.8	2.7
뉴질랜드		3.1	2.6	3.1	3.2	3.0
OECD		2.1	2.4	2.1	2.4	2.1
비회원국	브라질	0.7	0.7	1.6	1.9	2.3
	중 국	6.6	6.8	6.4	6.6	6.4
	인 도	7.3	6.7	7.7	7.0	7.4
	러시아	1.4	1.9	1.6	1.9	1.5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외 관계부처 합동(2017.11.30.)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 ※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1명 참석

<세계경제 현황과 신산업 대응 현황>

-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ICT 기업*이 모두 차지,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 107개사, 중국 56개사 기업이 차지(2017.9월 기준)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배출이 부재
 -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MS,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 ※ 한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2개사(쿠팡, 엘로모바일)
- [우리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 ※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 2016년): 45개국 중 25위(1위 스위스, 5위 미국, 12위 일본, 25위 한국, 28위 중국)
 -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18.6%) >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현대경제연구원 조사, 2017.5월)
 - ※※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2017.7월)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주요 내용>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㉔ 국내단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념]** △입법방식 전환...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 를 도입 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입법방식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 말)
 - **(혁신제도 도입)**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향후 계획]** △입법방식 전환...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 및 확정(12월 말), △**혁신제도 도입**...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허용 근거 마련
 -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특례 도입* (~2018.6월 발의)
 -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2017.12)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 중 → 지역특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도입(~2018.6월 발의)

<주요 부처별 규제혁파 추진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 을 **개정***하고, △제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
 -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산업통상자원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20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㉔ 국내단신

- **[금융위원회]**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험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트**(어느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불분명한 지역을 이르는 말)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
- **[국토교통부]** △20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2018년) 계획
 -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보건복지부]**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효과**를 **검토**하고,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 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 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민간 참석자들의 주요 제언 내용>

- **[규제샌드박스]**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건의, △실증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 노력 및 축적된 데이터의 정보 공유·확산 필요, △샌드박스 운영 시 민간의 참여확대 필요
- **[신산업 규제효과]** △소비자 동의하에, 기존 금융기관에 집중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유전체 분석, 세포치료, 제대혈 등 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법령해석 등 필요, △신제품 출시 단계 시 신속·명확한 인증 등 절차적 문제 해소
- **[기타]**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초기단계 스타트업 만이 아닌 창업 후 도약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조성 필요

연구지원 농촌진흥청, 단기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17.11.27.)

□ 개요

- [농촌진흥청, ‘전국 6개 농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 실시, 11.27.]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단기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지역 실정에 맞게 감성체험을 위주로 꾸며졌으며, 농업·농촌의 인적, 물적 자원과 문화 활동을 통해 체험자의 이야기와 경험, 깨달음에 대해 서로 공유
 - ※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농장(주뜨락, 쉽드림, 나폴리농원, 지리산 휴가, 산토끼 교육농장, 치유벗)에 프로그램을 적용
- (추진 배경) 농업은 관광농업을 넘어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으며, 6차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추진 목적) 농촌교육농장 등의 국내 농장, 정원 상황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안)을 개발하고 각 농장에 적용,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 (의의) △최근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유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 △지역 농가가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귀농·귀촌 등으로 인해 생기는 농촌지역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
- (향후 계획) 단기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만들어 치유농업을 도입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농장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

□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적용 결과

- [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23% 높아졌고, 일반아동이 느끼는 긴장감은 76%나 감소, 인성은 6% 향상된 것으로 조사
-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22% 감소했으며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은 55%나 증가했고, 공격성(90%)·좌절감(78%)·우울감(73%)이 감소, 스트레스나 긴장, 분노도 각각 72% 감소
 - ※ 코티졸과 도파민 측정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으며, 다른 항목은 표준화된 측정방법인 설문으로 조사

㉔ 연구지원

Ⅱ (주) 프락 (경북 경산) 적용 결과

(대상자 수=7)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둑기	3.71	5.86	0.046*	58 ▲ z
친사회적행동총점	21	26	0.028*	24 ▲

※ *, **: significant at $p < 0.05$, 0.01 leveled by wilcoxon signed-rank test.(95% 유의수준에서 p (유의확률)값이 0.05이하이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음을 의미함).

z: 프로그램 전 점수를 100%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프로그램 후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냄.

Ⅱ 쉽드림 (전북 고창) 적용 결과

(대상자 수=10)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5.70	2.00	0.033*	65 ▽
공격성	1.80	0.00	0.042*	100 ▽
신체화	2.80	1.40	0.048*	50 ▽
우울	5.70	2.00	0.033*	65 ▽
피로	6.10	3.00	0.014*	51 ▽
좌절	6.60	2.50	0.028*	62 ▽
감정	7.30	2.60	0.018*	64 ▽
신체	10.10	4.70	0.010*	53 ▽
인지	7.90	3.10	0.049*	61 ▽
행동	8.60	3.20	0.008**	63 ▽
스트레스총점	33.90	13.60	0.008**	60 ▽
도파민	375.63	752.56	0.013*	100 ▲
코티졸	9.19	6.94	0.047*	24 ▽

Ⅱ 순창 치유벗 (전북 순창) 적용 결과

(대상자 수=12)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6.58	1.75	0.001*	74 ▽
분노	6.75	1.08	0.005*	84 ▽
우울감	6.92	1.33	0.008*	81 ▽
피로감	7.42	1.67	0.003*	77 ▽
스트레스	40.42	7.5	0.002*	81 ▽
도파민	68.12	106.9	0.041*	57 ▲

Ⅱ 지리산 휴가 (전남 구례) 적용 결과

(대상자 수=10)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4.00	1.10	0.020*	73 ▽
분노	5.10	1.20	0.046*	76 ▽
피로	5.10	2.00	0.024*	61 ▽
좌절	4.80	0.90	0.027*	81 ▽
신체	7.30	1.40	0.012*	81 ▽
행동	7.10	2.40	0.021*	66 ▽
스트레스총점	26.70	7.20	0.028*	73 ▽
도파민	270.67	550.98	0.013*	104 ▲
코티졸	7.83	6.08	0.037*	22 ▽

㉔ 연구지원

■ 산토끼 농촌교육농장 (경남 창녕) 적용 결과 ■

(대상자 수=15)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1.67	0.40	0.049*	76▽
지해	27.47	30.10	0.026*	10▲
인간애	18.40	19.20	0.032*	4▲
감상력	5.67	6.33	0.008*	12▲
영성	3.27	3.93	0.039*	20▲
초월	27.73	29.47	0.030*	6▲
인성	133.20	140.63	0.025*	6▲

■ 나폴리농원 (경남 통영) 적용 결과 ■

(대상자 수=13)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6.93	1.79	0.005**	74▽
공격성	3.15	0.23	0.018*	93▽
신체화	3.77	0.77	0.005**	80▽
분노	8.00	2.23	0.002**	72▽
우울	8.38	2.31	0.005**	72▽
피로	8.77	3.15	0.002**	64▽
좌절	9.15	2.31	0.003**	75▽
감정	10.14	2.64	0.005**	74▽
신체	14.00	3.08	0.002**	78▽
인지	12.85	4.00	0.005**	69▽
행동	10.92	3.08	0.005**	72▽
스트레스총점	45.21	13.50	0.005**	70▽
도파민	34.82	57.83	0.023*	66▲
코티졸	7.87	4.99	0.002**	37▽

■ 성인대상 전체 종합 결과 ■

(대상자 수=46)	프로그램 전 평균	프로그램 후 평균	P(유의확률)	증감(%)
긴장	5.93	1.67	0.000***	72▽
공격성	2.31	0.22	0.000***	90▽
신체화	2.91	0.84	0.000***	71▽
분노	6.40	1.80	0.000***	72▽
우울	6.49	1.73	0.000***	73▽
피로	7.00	2.47	0.000***	65▽
좌절	7.13	1.58	0.000***	78▽
감정영역	8.04	2.02	0.000***	75▽
신체영역	11.02	2.89	0.000***	74▽
인지영역	9.89	2.56	0.000***	74▽
행동영역	9.18	2.87	0.000***	69▽
스트레스총점	37.48	10.59	0.000***	72▽
도파민	259.48	400.94	0.002**	55▲
코티졸	8.12	6.35	0.000***	22▽

현장여론

농업의 다원·공익적 기능 중 헌법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기능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 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전문은 리porter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요

- 수집기간: 2017. 11. 1. ~ 11. 30.(총 29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농업의 다원·공익적 기능 중 헌법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기능

- 농업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음. 헌법에 농업 부분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돈이나 경제적 가치 외에 체험을 통한 교육, 도농을 연결하는 사회 결속력, 식량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차원 등 양적 데이터 보다는 질적 데이터, 즉 농업의 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제적으로 돈이나 가치가 얼마냐는 중요치 않을 것임. 행복권, 교육권, 사회결속력 등에 대한 내용이 헌법 개정 시 농업의 주요 기능으로 추가되면 좋겠음. <이○○, 충북>
- 아이들이 놀러와 농촌체험을 하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농장주도 그들보다 더한 행복감을 느끼게 됨. **누구나 찾아와 배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만으로 농촌과 농업의 가치는 매우 클 것이며, 이와 같은 농업의 순기능은 통계나 수치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큰 파급력이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가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후대에도 잘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숙제임.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박○○, 충북>
- 본인의 사례를 들면, 이곳에 15년 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도시민이 투기용으로 땅을 사고 농사짓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허허벌판이 거의 우범지역을 방불케 했었음.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우면서 주변을 가꾸어 경관도 좋아지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불을

㉡ KREI리porter 현장여론

- 밝혀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도 무섭지 않게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음.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로써 사회적 비용절감 등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음.** 올해 큰 홍수가 났을 때도 아파트 주민은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해 집밖에 나오질 않지만 농사꾼은 나서서 물길을 뚫고 해결하는 등 안전관리 역할까지 해내고 있음. 이밖에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 기능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임.<김○○, 충북>
- 이산화탄소 등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여 농어업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탄소세 도입이 시급함.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농지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직불금과 휴경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만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으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갈 수 있을 것임.** 식량안보나 쾌적한 공기의 수혜는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 책임은 농업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됨.<이○○, 충북>
- 우리 농업은 식량조달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경관 제공,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까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농원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넓은 목장이 있는 농장을 방문하게 해 자연경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하며, 스위스에서는 푸른 목초지에 면적당 마릿수를 제한 하여 젖소를 방목해 키우면 그에 따른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함. 이처럼 **자연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농촌의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이라 생각함.**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을 단순히 생산기반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원적·공익적 해석을 통해 그 가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람.<현○○, 제주>
- 헌법 개정에 넣어야 할 만큼 중요한 농업의 국가적 요소라고 하면,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어떠한 농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나라 농업이 여실히 보이고 있음.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농업은 홍수 조절, 경관 보존,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 이를 헌법에 명시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곽○○, 대구>

㉔ KREI리porter 현장여론

- 국가는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음. 농업은 점점 경제적으로 뒤쳐져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젊은 층이 없어져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현상으로 공동화(空洞化)가 되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토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관리에 따르는 비용부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여름철 호우기에 집중적으로 강우량이 늘어나는데 벼를 재배하는 논이 없다면 엄청난 수해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것임. **자연재해로부터 국토 유지 및 보호, 국민들의 경관 및 휴식처 제공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국토와 국민의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해주기 바람.**<김○○, 경북>
- 1~2년의 짧은 기후변화에도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방사능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과 맞물려 식량전쟁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음. 때문에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보존하는 농업의 순기능을 반드시 헌법적 가치로 인정해 명시해주어야 함.**<이○○, 전남>
-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농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관련 국책사업을 선정, 투자개발을 하고 있다고 함. 우리도 헌법에 농업의 존재이유를 비중 높게 다루어야 할 것임. **생명 중시와 환경보호, 식량안보와 국민의 휴식처 제공 등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존재 이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존재이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며 농업임.** 농업의 본원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빠른 발전으로 변화하게 될 농업은 미래 산업의 원천이 될 것을 모두가 공감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임○○, 경기>
-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농업 측면에서만 그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나 기재부 등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인정해야 헌법 등에 적용 가능할 것임.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국제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가치를 산출해야 할 것임.**<김○○, 충북>
- 농업이 국가 사회 발전 및 미래 국민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많음. **농촌의 경관과 수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농업인의 권익 및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농지를 농민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정○○, 경남>

㉡ KREI리porter 현장여론

- 농산물이 커가는 과정에서 잎은 산소를 만들고, 뿌리는 물을 정화해주며,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는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암 환자들이 농촌에 내려와 생활하며 건강을 되찾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처럼 농업이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로운 기능이 있기 때문임.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농촌만의 큰 공익적 기능일 것임.<송○○, 강원>
-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곧 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나고 자란 먹거리 보다는 멀고 먼 남의 땅에서 자란 것을 수입해 먹고 있는 실정임. 농수산물 시장을 무차별하게 개방한 결과, 푸드 마일리지는 증가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면서 점차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라 생각함. FTA로 인해 자동차와 휴대폰 등 대기업의 공산품 수출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우리 국민의 근간이 되는 먹거리, 농업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과 농업인이 보호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임.<서○○, 충북>
- 농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농지 매매 시 양도세가 또 발생하게 되어 농업인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농업을 포기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음. 내가 왜 농사를 해야 하는지 목적도 없이 농업인 대부분이 부채로 어려워하고 있음.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농업법이 개정되기를 바람.<김○○, 경기>
- FTA를 통해 외국에 공산물을 팔고서 농산물은 희생해 수입농산물을 가져오는데,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익에 대한 배분이 공평하지 않음.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농업이 피해 입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상해줄리 없을 것임. 농업에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해부분은 명확히 판단하여 보상해줄 것을 요망함.<임○○, 충북>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